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1. 8. 17 (화)

meritz Strategy Daily

전략 공감 2.0

Strategy Idea

중국의 재정정책 기대 = 희망고문

오늘의 차트

8월 4일 이후 외국인 코스피 6조 매도, 외국인 순매수 비중에 따라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

칼럼의 재해석

가계부채와 해결방안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글로벌 투자전략-신흥국
Analyst 최설화
02. 6454-4883
xuehua.cui@meritz.co.kr

중국의 재정정책 기대 = 희망고문

- ✓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함께 재정확대 기대감 부각. 예년대비 낮은 재정 집행률로 하반기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며 이는 경기 하방 지지요인으로 일부 작용할 것
- ✓ 단 시진핑 뉴노멀 시대 재정정책 확대 → 인프라투자 및 경기 반등의 매커니즘은 어려울 것, 하반기 중국의 경기 부양은 여전히 통화정책에 의존
- ✓ 대신 채권발행 집중, 추가 통화완화 부재에 따른 일시적 금리 반등과 성장주의 조정에 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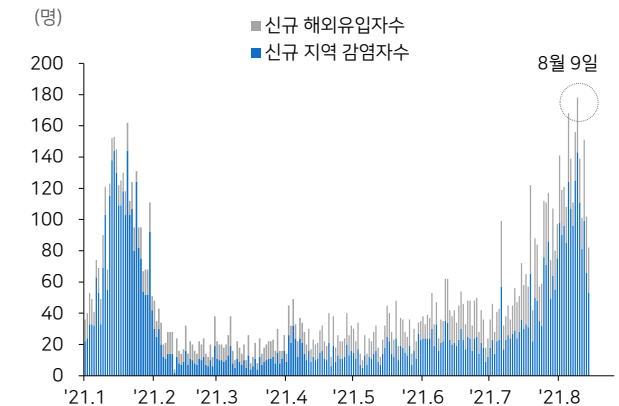
중국 재정정책에 쏠리는 기대감

경기 둔화와 함께 중국의
재정정책 확대 기대감 부각

8월에 들어 중국의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당국의 재정정책 확대 가능성에 주목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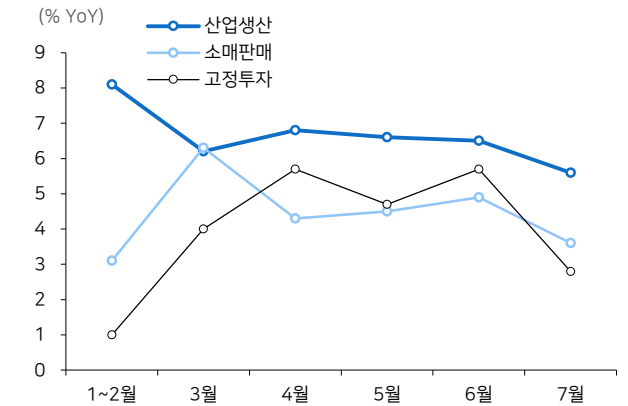
첫째는 경기 모멘텀 둔화이다. 7월 중국의 실물경기지표는 폭염, 홍수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락다운으로 모든 지표가 시장 예상을 하회, 특히 2년 전 대비 연평균 성장률(CAGR)이 6월까지의 회복에서 후퇴했다. 7월 PMI, 통화량 등 선행지표도 부진하며 앞으로 중국이 경기둔화 압력이 큼을 암시하는데, 최근 발표된 사교육 등 규제들까지 겹치면서 실업과 소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준을 인하가 이미 발표된 환경에서 재정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1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추이



자료: 국가위생보건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투자의 2yr-CAGR: 7월 후퇴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둘째는 7월 30일 정치국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재정집행은 지방정부에 대한 부채 리스크 관리, 지방채 발행 심의 강화 등의 원인으로 연초 양회에서 언급했던 강도에 비해 부진했다. 그러나 7월 30일의 정치국회의에서 하반기 예산 내에서 투자 집행과 지방채권 발행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올해 말과 내년 초의 실제 업무량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하면서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하반기 재정정책 집행 증가, 경기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

상반기 낮은 재정 집행율로
하반기 확대 여력 충분

하반기 예상되는 재정정책 확대 조치로는 1) 일반 재정지출의 증가, 2)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발행 가속화, 3) 필요 시 지방정부 부채 디레버리징 강도 완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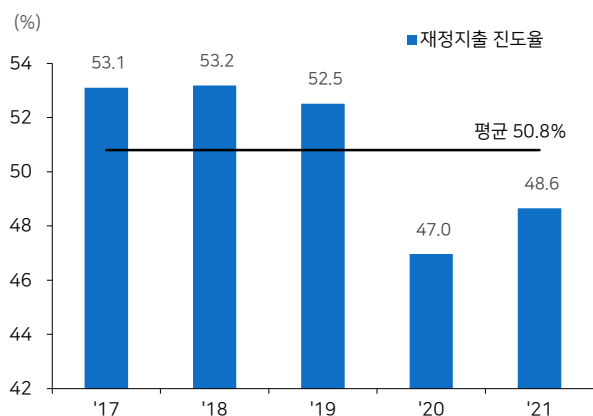
1) 일반 재정지출 증가

상반기 중국의 재정정책 진도율은 이렇다. 일반 재정지출액은 12.2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했지만, 연간 예산한도의 48.6%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충격이 심했던 작년(47.0%)을 제외하면, 2017년부터 통상 유지해오던 53% 수준을 하회한다(그림3). 올해 일반 재정지출의 연간 예산액인 25조 위안이고, 이 중 상반기에 이미 12.2조 위안을 지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약 12.8조 위안의 재정지출이 가능하다. 물론 작년 하반기 역기저효과로 재정지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이겠지만 상반기보다 규모가 커 경기 안정화에는 긍정적이다.

2)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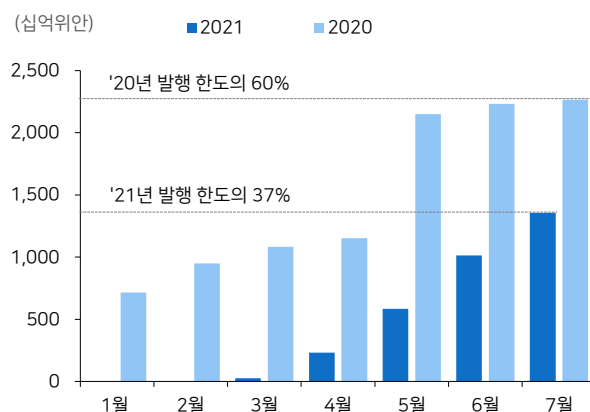
오히려 인프라투자의 주요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발행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상반기 중국의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와 신규 투자 프로젝트 심의 강화 등의 이유로 예년에 비해 발행이 느렸다. 7월까지 신규 발행액은 1.35조 위안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37%에 불과하다. 작년 같은 기간의 발행 비율이 60% 것과 뚜렷하게 대조된다(그림4).

그림3 연간 상반기 일반 재정지출 집행 진도율 비교



자료: 중국 재정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액: 연간 한도의 37%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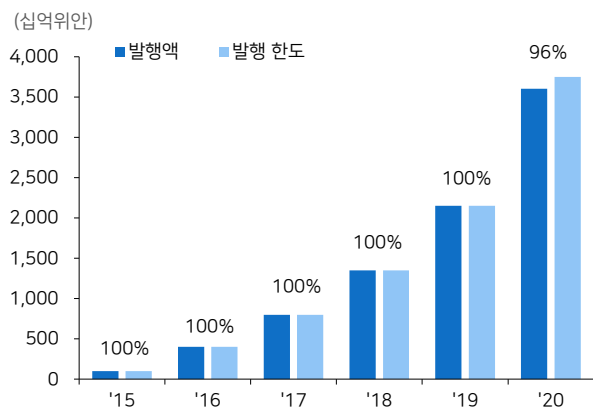
자료: 중국 인민은행, 재정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지난 5년간 중국의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보면, 대부분 연간 발행 한도의 100%를 소진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작년에만 한도 소진율이 96%에 불과했다(그림5). 따라서 올해 비록 발행이 늦어졌지만 발행 한도를 거의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8~12월 5개월간 발행 물량이 집중될 것이다. 100% 소진율로 계산하면 향후 5개월 월 평균 발행액은 4,590억 위안으로 6~7월의 발행액(각각 4,300억, 3,400억 위안)보다 많으며, 이는 일부 인프라투자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7월까지 부진했던 인프라투자를 견인할 전망이다(그림6,7).

3) 필요시 지방정부 부채 디레버리징도 소폭 완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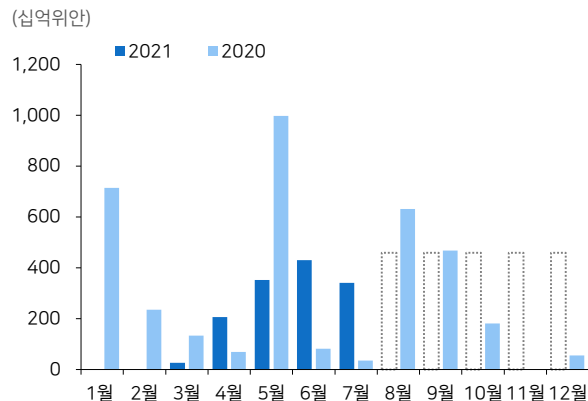
그 외, 만약 대내외 매크로 불안으로 중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지방정부 부채 규제를 소폭 완화도 배제할 수 없다. 마치 2018년 하반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정정책을 확대했었던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재정정책 강도는 경기 둔화폭에 달려있다.

그림5 지방정부 특별채 연간 발행액: 거의 100% 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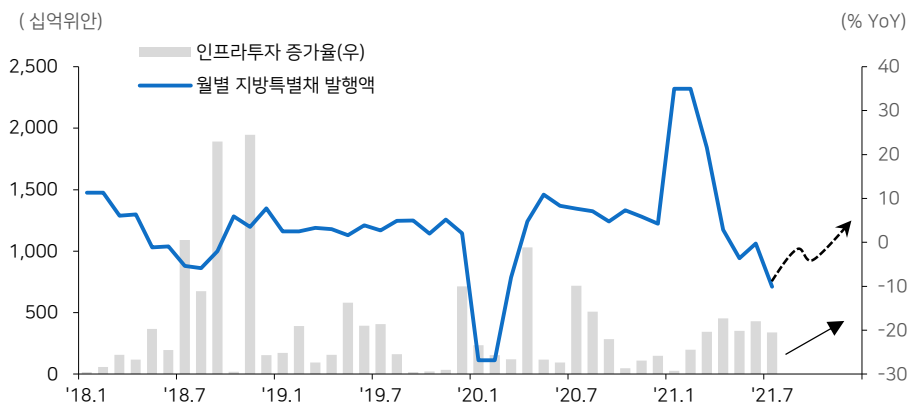
자료: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8~12월 월평균 4,300억 위안의 지방특별채 발행



자료: 중국 인민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월별 지방특별채권 발행액과 인프라투자 증가율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인민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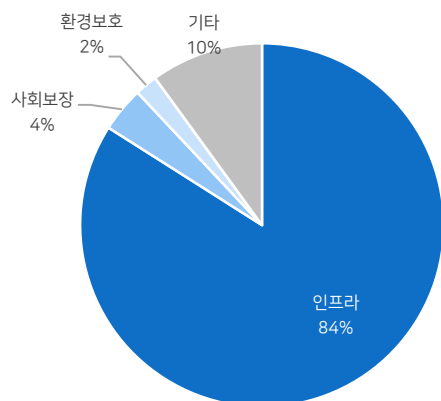
단 시진핑 뉴노멀 시대 인프라투자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

그렇다고 중국의 재정 확대가 인프라투자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기의 견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용도에서 인프라투자 비중 점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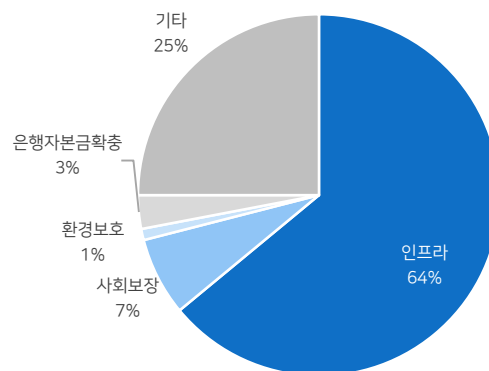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발행 용도 추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2018년에만 해도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액의 84%가 인프라투자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의 지방특별채 발행 용도를 보면 인프라투자를 위한 발행 비중은 64%까지 낮아지는 대신, 교육, 문화, 위생의료 등 사회보장용 비중이 7%까지 높아졌다 (2018년 4%). 한편 과거와 달리 중소형 상업은행 자본금 확충을 위해 약 3%의 자금이 발행되었다. 인프라투자의 재원이 분산되면서 인프라투자 견인 역할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그림8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용도(2018년)



주: 인프라에는 판자촌, 농촌 도시 건설, 교통, 수력시설 투자 등이 포함되고, 사회보장에는 교육, 문화, 위생의료 등 사회 안전망 투자가 포함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용도(2021년 7월까지)



주: 인프라에는 판자촌, 농촌 도시 건설, 교통, 수력시설 투자 등이 포함되고, 사회보장에는 교육, 문화, 위생의료 등 사회 안전망 투자가 포함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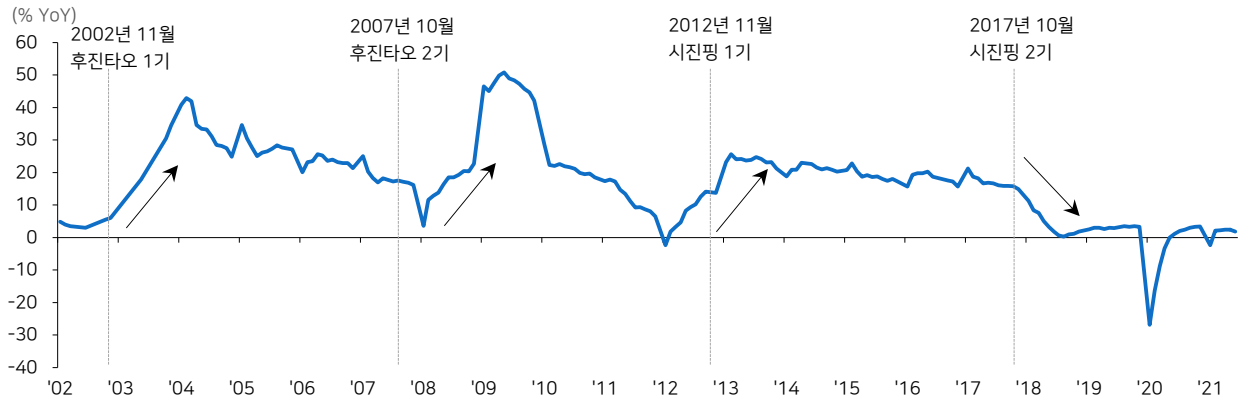
시진핑 뉴노멀 시대 인프라투자 추진 강도 약화

한편 시진핑 2기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부터는 인프라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안정화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 통상 10% 이상의 인프라투자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경제구조 전환을 비롯한 질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인위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지양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일각에서 내년 시진핑 3기 연임을 앞두고 안정적인 경기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하고 있지만 과거 흐름을 보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그림10).

오히려 시진핑 지도부에서 실시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전통 인프라투 확대보다는 1) 중소형기업의 세수 우대, 2) 고용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3) 의료, 교육 등 분야의 사회 안전망 확충, 3) 디지털시대를 위한 신형 인프라투자 증가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하반기 중국의 재정정책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인프라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 견인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반기 중국의 경기 둔화 방어는 여전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에 더욱 의존할 것이다. 중국에서 추가 통화완화를 기대해도 좋은 이유이다.

그림10 '17년 시진핑 2기에 들어 인프라투자를 통한 경기 견인 동력 약화



주: '21년의 인프라투자 증가율은 2yr CAGR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단기적으로 수급에 의한 금리 일시적 상승은 중국시장에 부담

단기적으로 재정정책 확대로
채권 발행 증가하며 금리 상승
부담으로 작용 가능

오히려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재정정책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성장주 중심의 조정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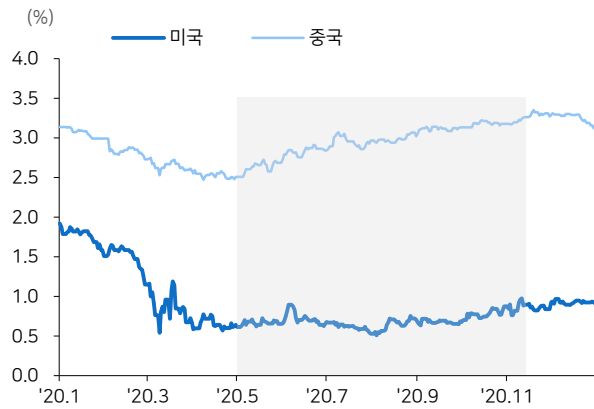
작년 하반기 중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경기 회복과 지방정부채 발행 증가, 중립적인 통화정책의 선회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2.5%에서 11월 말의 3.3%까지 빠르게 반등한 적이 있으며, 이에 중국 주식시장이 8~10월 해외에 비해 상대적 약세를 기록한 바 있다(그림11, 12).

물론 올해는 경기가 하강 사이클이어서 채권 수급에 의한 금리 반등폭이 크지 않을 것이지만, 발행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8~9월과 12월의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통화완화 조치가 있기까지 현재 성장주 일변도의 장세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단 중장기 성장주 투자매력 다분,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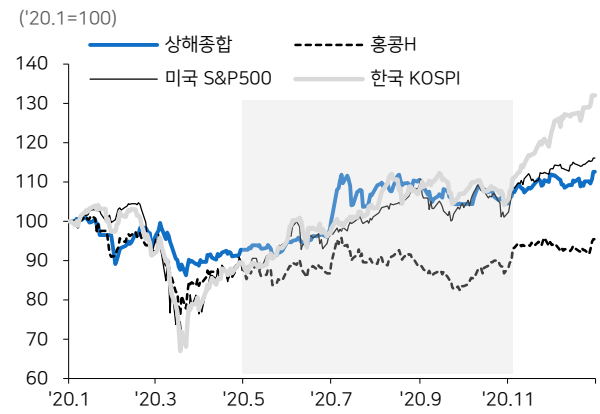
단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신재생, 반도체 등 성장 산업의 상대적 강세를 전망한다. 이런 산업은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이익 보호, 산업 고도화, 지속가능한 성장의 큰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재정정책 확대에 따른 단기 변동성을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 드린다.

그림11 '20년 연간 미중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20년 중국, 홍콩, 미국 및 한국의 대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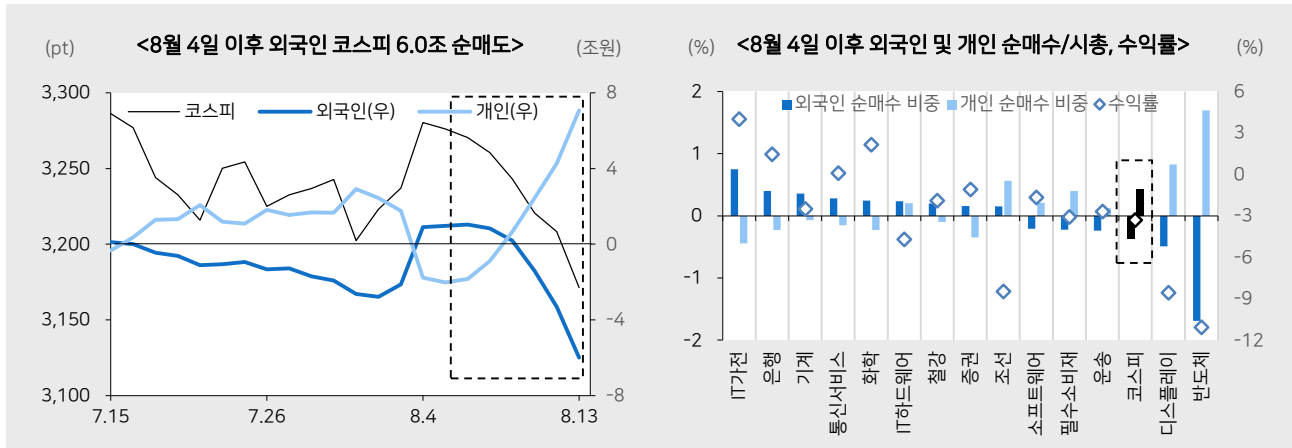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강봉주 연구위원

8월 4일 이후 외국인 코스피 6조 매도, 외국인 순매수 비중에 따라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



8월 이후 코스피 지수 하락
동기간 외국인 코스피 6.0조 매도

2021년 6월 코스피 지수가 잠시나마 3,300을 돌파하는 등 하반기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8월 4일 이후 8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110pt 하락하며 8월 13일 3,170pt로 마감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6.0조를 매도했고 개인은 7.1조 매수하면서 매수방향이 큰 폭으로 엇갈렸다. 이에 대해 외국인 매도 강도와 업종별 차이, 수익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매도 강도 강함
코스피 내 외국인 지분율 하락

우선 주목할 점은 최근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외국인은 연초 이후 28.9조원을 매도했는데 최근 8거래일 간 6조를 매도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일별 8거래일 간 외국인 매도 기록을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코스피 내 외국인 지분율은 34.3%에서 32.8%로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외국인 매도 소수 업종에 집중
순매수 비중과 수익률 비슷한
방향성

업종별로 살펴보면 19개 업종 매수, 7개 업종 매도로 소수 업종에 매도가 집중됐다. 외국인 매도 비중이 높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수익률은 낮았고 외국인 매수 비중이 높았던 IT가전, 은행의 수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 비중과 수익률 순위의 방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외국인 수급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기간이었다.

외국인이 매도한 소수 업종에
개인 매수 집중
소수 업종 집중 매수는 주의 필요

정리하자면 8월 4일 이후 6조의 외국인 매도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매도다. 외국인 매도는 소수 업종에 집중됐고 외국인 매수 비중과 수익률의 방향성이 비슷했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이 매도한 업종에 개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수급의 영향이 큰 현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소수 종목들에만 투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 매도세가 완화되기를 기다리거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한 업종과 분산해서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칼럼의 재해석

은경원 수석연구원

가계부채와 해결방안 (Financial Times)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임금 인상,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투자 증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함께 심각해졌다. 한국 가구들은 평균 부채가 연 소득의 171.5%에 달할 정도로 부채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03.8%로 국제결제은행이 조사한 43개국 평균 62.1%와 비교된다.

특히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이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기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 신용대출은 116.9조로 4년 전보다 33% 증가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이 빈곤한 대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문제는 금융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이례적으로 높은 자산가격과 과도한 차입결합이 급격한 부채 디레버리징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불안정이 확대된다면, 중장기 경제 성장 전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4분기에 예상되는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철회에서 부실대출 증가가 유발되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타격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은 핀테크 기술의 확산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중금리 대출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여 신용시장의 이분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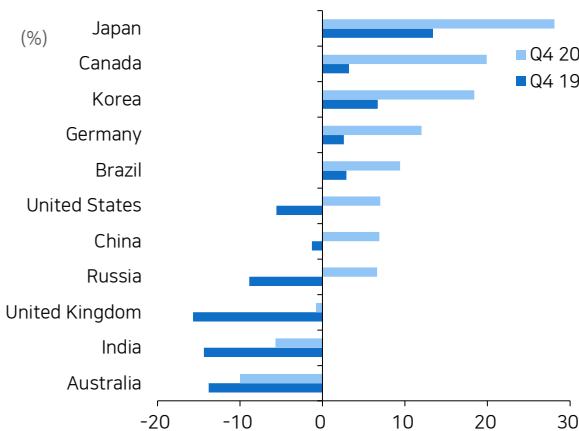
금리인상 소수의견 제시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고승범 前 금통위 위원이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코로나 19 번이 확산세를 고려했을 때, 곧 있을 26일 금통위에서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동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졌으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은 가계부채 상황을 환기하는 촉매제로 의미가 있다.

한국은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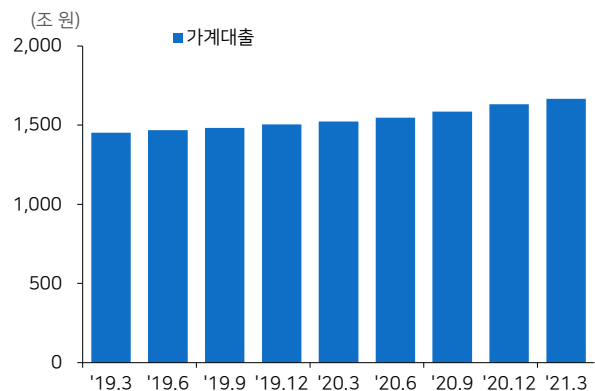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 1분기 말 약 1,760조원에 달하고 있다. 연 소득 대비 가구들의 평균 부채가 171.5%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설문조사에서는 20년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민간대출이 18.4%로 타 국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이며 조사대상 아시아 국가 중 가계부채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기록하고 있다.

그림1 GDP 대비 민간대출 비중 추이



자료: B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한국 가계대출은 증가세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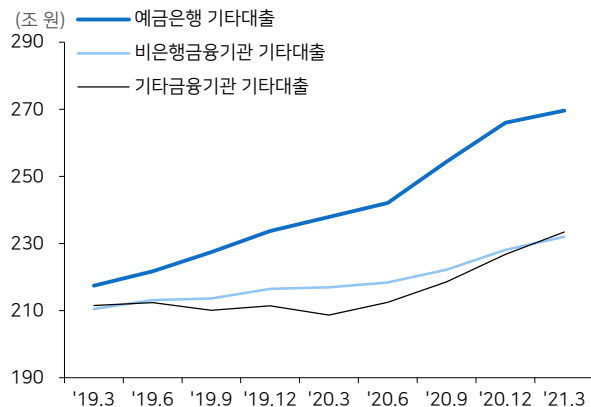
은행권 기타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

한국의 가계부채는 최근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중 6.3조원보다 확대된 9.7조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6.1조원(+19.6% QoQ), 기타대출은 3.6조원(+176.9% QoQ) 규모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기타대출의 증가폭이 더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MZ 세대를 필두로 공모주 청약 등 자금수요 급증이 있다.

비은행권 기타대출 규모 역시 전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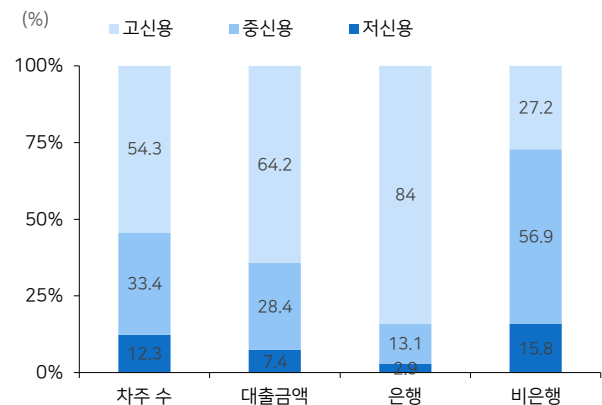
은행권 기타대출 증가폭의 급격한 확대보다 특히 집중해야 할 부분은 비은행금융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의 기타대출 상승세이다. 전체 금융기관들의 기타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올 1분기 기준으로 상승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다. 특히 은행권의 기타대출에 비해 비은행금융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의 기타대출 상승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변했다. 7월 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6조원으로 이 중 기타대출이 4.1조원 (+57.6% QoQ)이다.

그림3 한국 금융기관의 기타대출 현황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 (21년 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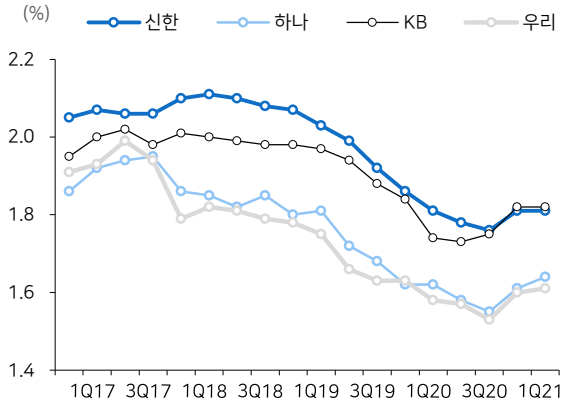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저신용자 중심 부채 확대 우려
잠재적 리스크 확대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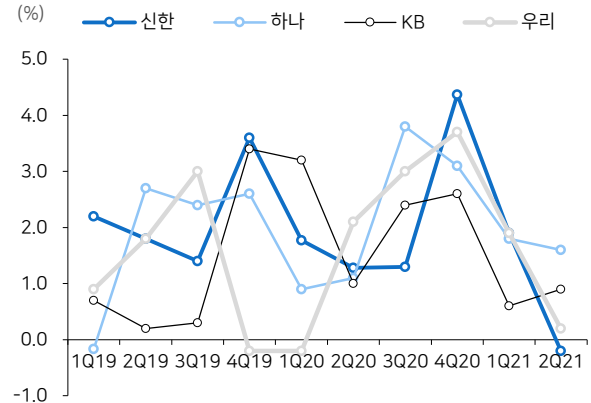
주요 4대 시중은행의 NIM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 확연히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출시한 대출상품 개수가 100개 이상이 된다는 점을 들어 공세적 영업행위가 문제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21년 들어 주요 4대은행의 가계대출 성장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2금융권 및 비은행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누리며 가계대출을 늘려왔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금리 인상 등 변수가 있을 때 신용등급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한국 가계부채는 구조적 변화로 잠재적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가 가능한 취약성이 확대되었다.

그림5 주요 4대은행의 NIM 추이



자료: 각 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주요 4대은행의 대출성장률 추이



자료: 각 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새로운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새로운 가계부채 해결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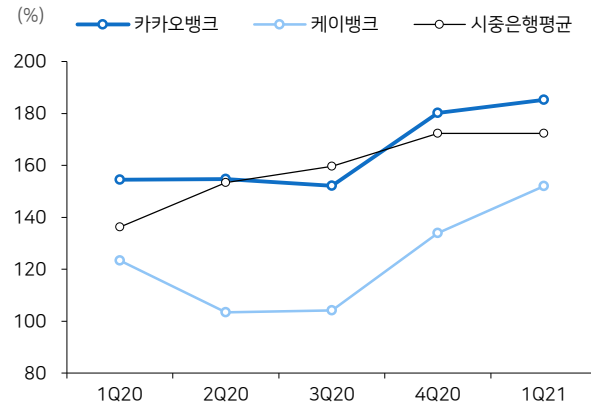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들이 실행되어 왔다. 거시경제정책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있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는 가계여신 건전성 감독 강화,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의 방안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해결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림7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가계부채 해결

- ◆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혁신적 방식으로 중·저신용자(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 적극 공급 ('20년말 2조원 → '21년말 4.6조원으로 +2.6조원 공급 확대 계획)
-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3년말 30% 상회 목표
- *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잔액/전체 신용대출 잔액
- ②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 실제 고객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대안정보 활용 확대 등
- ③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 ① 이행현황을 비교공시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
② 미 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
③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중점 심사
④ 인터넷전문은행 상장(IPO) 시 투자자에게 정확히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대손충당금 적립률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대출시장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은 2015년 6월 IT기술 발달에 따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인가 조건으로 중금리대출을 제시하며 가계대출 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특히 중금리대출 시장은 형성이 어렵고 적극적 공급 유인이 부족한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공급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2023년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중신용플러스대출'과 '중신용비상금대출' 등 상품 2종을 출시하며 중금리대출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 인터넷전문은행 상황만으로
변화된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엔 부족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카카오뱅크만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부
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카카오뱅크는 BIS 기준 총자본비
율이 19.85%, 대손충당금적립률 185.29%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동
은행 1곳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다른 인
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14.20%,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1.97%
로 카카오뱅크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직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안으로 의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가 전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변화에 맞춘 해결방안이 요구되어
보인다. 수요로 인한 문제는 수요 측면에서 해결함이 필요하다.

원문: *South Korea looks to fintech as household debt balloons to \$1.6 (Financial Times)*